

# 高等學校 『한국지리』 教科書의 統一指向的 改善方向 模索

金在漢\*

< 차 례 >

I. 머리말	1. 정치적 배경
II. 남북한 지리교과서의 대립적 구조	2. 통일교육의 재정립
1. 상대방 실체 불인정과 영역 표현	IV. 북한관련 『한국지리』 내용의 개선
2. 한반도 지방구분의 상이성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차원
3. 체제우월적 기술방식	2. 통일교육 강화차원
III. 한반도 정세변화의 의미와 통일교육의 방향	3. 『한국지리』 교과서 편제 개선
	V. 맺음말

主要語 : 한국지리 교과서, 북한지리, 한반도 정세변화, 통일교육.

## I. 머리말

80년대 말 이후의 북방정책에 의한 전방위외교, 동구와 구소련의 와해로 상징되는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채택 등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교 학생을 염두에 두어 종래의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한 도식적인 교육을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을 취하여 구체적 내용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지 않는 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 논쟁을 피하자는 것은 또한 기존의 교과서의 보수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국가가 교과서 내용 기술에 있어 자국 중심의 시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 통일국가를 지향함에 적대적인 북한을 도외시킬 수 없다는데서 고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북한과 관련된 한국지리 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북한을 다룸에 어떠한 인식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취급 분량과 내용의 질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내용을 개선시킬 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방향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제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중립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내용구성의 세부적인 지침의 수립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겐 교과서와 관련된 당국과 학자 그리고 일선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

교육현장의 요구와 제언이 수렴되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제의 대략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II. 남북한 지리교과서<sup>1)</sup>의 대립적 구조

### 1. 상대방 실체 불인정과 영역 표현

남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통치력이 상대방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하고 있다. 남한<sup>2)</sup>의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조는 각기 한반도에서 유일한 단독 대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준수라는 취지에서 남한 지리교과서에서는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으로, 북한 지리교과서에서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경우 우리나라 전도 및 각 지방도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휴전선의 존재를 붉은 破細線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세계지도(세계전도, 동아시아 세밀도)에서는 휴전선이 없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삼고 있다. 북한측 지리부도를 보지 못해서 확인은 안되었지만 남한의 경우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유수한 지도첩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휴전선을 남북한의 國界로 표현하고 있어 좋은 대조가 된다. 세계 학계에서는 한국의 휴전선을 잠정적 성격을 지닌 사실상의 국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같이 분단 경험을 하였던 독일의 경우에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유엔동시가입 후 서독측은 동서독 경계를 국계에 준하는 표현(破線 형태의 국계)으로 국내외에 통일시키고 외국인에 동서독 특수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바 있었다.

문제는 남북한 사이의 단독 대표권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있으므로, 남한의 경우 만이라도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통일 노력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과거 독

일과 같이 지리교과서, 지리부도에 분단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통일이 분단의 극복이라면 분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서술할 남북한 지리교과서의 냉전적 대립구조는 모두 배타적 영토고권의 주장에서 연유한다.

#### 1) 상대방 지칭의 혼란

국민교육 입장에서 교과서는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전 한반도 또는 상대방(북한)의 지칭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상대방 지칭은 아주 혼란스럽다.

남한 지리교과서를 보면 한반도 전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으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헌법 조항에서, 한국은 남북한을 통칭한다는 점에서(예: 한국지리 교과서 명칭)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남한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전 한반도를 지칭하는 경우와 중복되어 문맥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을 지칭하는 말로 '韓國'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지만 남한이라는 용어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남쪽 실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용상 명확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단독대표권을 포기치 않아 교과서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인상이다.

북한 지리교과서의 경우, 한반도 전역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또는 '우리나라'로 표현하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를 '공화국 북반부 또는 북조선', 남한을 '공화국 남반부 또는 남조선', '남조선 피뢰도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을 지칭할 때 '한국'과 '조선'이란 말을 근간으로 남 혹은 북의 방위를 덧붙여 반국가집단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2) 휴전선과 행정구역

남북한을 공통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영역, 자

연환경)은 휴전선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만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휴전선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측의 현재 행정구역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 행위의 인정, 나아가서는 국가성의 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로 간주된다. 남한의 경우 문교부의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취급함에 있어 1945년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북한에서 임의로 변경한 행정구역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소위’ 또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 시, 군, 구역’에 상응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문교부, 1988; 교육부, 1993). 지도로 표현할 경우에는 내무부가 정한 행정구역도를 적용하고 북한의 행정구역을 소개할 때에 북한이 개칭한 지명 중 김정숙군, 김형직군, 김형권군, 김책시 등 김일성 가계 인물의 찬양, 선전도 밝힐 것을 지시하고 있다(교육부, 1993).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구역을 논할 때는 1특별시, 5직할시, 14도가 되는 셈이다.

북한 지리교과서에서는 행정구역을 표현함에 있어 남북한의 행정구역을 한 도엽에 표시하고 있다(조선지리, 1983). 남한과는 달리 교과서의 체제상 시·도 중심의 지방誌 기술 중심이어서 남한의 개편된 행정구역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선불리 남한의 실제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휴전선을 아예 道경계로 표시하여 북한의 통치권의 범위가 남한에까지 미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또한 남한의 지지적 내용이 북한측 시각에 의해 왜곡되었으나 대폭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우보다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 2. 한반도 지방구분의 상이성

남북한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의 실체를 인정치 않고 각기 ‘우리나라’의 범위를 전 한반도로 잡고 있으며 지방 분류도 서로 다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한다면 지역의 크기, 각 지역의 (정치)경제, 문화, 역사적 등질성 및

결질성에 기반하여야 함이 정상적이다.

남한의 경우 지리교과서에서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경계선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북부지방은 곧 북한을 말한다(국립지리원, 1980). 자료수준과 내용상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구별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본다. 지리교과서에서 이러한 지역구분의 이유에 대해서 ‘편의상’이란 표현 외에 달리 밝히는 바는 없다. 비록 ‘지역의 크기’ 기준에서 볼 때 북부지방은 중·남부지방을 더한 것보다 훨씬 크지만 거의 5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아 남한사회와는 이질적으로 변해 왔다는 점에서 등질성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대구분을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역구분과 관련시켜 볼 때, 남한교과서는 북부지방을 관서, 관북지방으로만 세분하여, 해서지방이나 관동 북부지방은 각기 관서, 관북지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구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류가 있는 것이 되므로, 보다 세분된 전통적 지역구분을 해주거나, 세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서북부지방, 동북부지방으로 방위개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전통적인 지역구분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작위적이다(조선지리, 1983). 즉 북한 지역인 관서, 관북, 해서, 관동지방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남한 지역을 삼남지방(또는 기남: 호서, 호남, 영남)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며 량호지방(호서, 호남)을 비교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의 중심인 기호지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음을 북한의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 북한은 지방구분에 있어 실제 남북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5개 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서북지방: 평남북, 평양, 남포, 자강도.
2. 동북지방: 함남북, 청진, 량강도.
3. 중부지방: 황해남북, 개성, 강원도 ; 강원도(남), 서울·인천, 경기도.
4. 동남지방: 경남북, 대구, 부산.
5. 서남지방: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

이러한 지방구분을 본다면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우리나라'로 보는 관점을 철저히 관철시킨 점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크기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일견 합리적인 지역구분이라 보여질 지 모르나 '중부지방'의 경우 서로 다른 체제에 의해 지역이 단절되고, 이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으로 구분한 것은 남한의 실체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교과서의 지역구분의 상이성은 영역의 단일 대표권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적 지역구분으로 상대측의 정치적 의미를 약화시키는데 연유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는 것이다.

### 3. 체제우월적 기술방식

남북한이 지리교과서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과장, 미화시키며 상대방을 비방, 격하시켜 온 것은 냉전 구조하의 체제경쟁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남한 지리교과서의 경우, 북한을 묘사함에 있어 공산집단에 의한 모든 활동의 통제, 군수산업 위주의 생산활동, 주민 생활의 어려움, 낮은 농업 생산성, 에너지의 부족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의 기술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할 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실상을 알아야 할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그 실상을 초래한 체제적 문제점,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분석 내용이 결여되어 '왜 그렇게 되었나'라는 의문에 대한 적절한 규명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냉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방, 격하시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철저히 북한 체제의 미화, 남한 체제의 격하, 비방의 입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격하, 비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적 표현:

남한의 공업 발달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노동

자에 대한 착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비교우위에 의한 개방 경제구조(예: 외자도입에 의한 공업 발달, 원료 수입)를 강대국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한의 주요 관광지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자본가의 돈벌이 장소로 격하시켜 북한의 인민복지 차원의 휴양지와 대비시키고 있다.

- 각 산업의 생산력 과소 평가:

남한의 농업 생산력이 감소되어 농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선전하고 있고, 그 원인을 관개 시설 미비, 농기계 부족, 치산치수 정책 부재, 농약·비료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토지황폐에서 찾고 있다. 남한의 수자원 활용, 지하자원 부존이 북한에 비해 빈약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을 과소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남북한의 객관적 비교를 회피하는 인상이다.

- 자연재해, 공해에 대한 부각:

농업의 풍수해가 잦으며, 공해 문제로 도시·공업지역에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나쁘고, 수질, 토양 오염으로 하천, 연안 생태계가 파괴가 극에 달해, 남한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공업 발달 등 경제력이 상당한 정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므로 산업 생산력을 과소평가하는 것과는 모순관계에 놓이게 된다.

- 특정 도시, 지역에 대한 비방: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남한 집권세력, 미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특정지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남한의 호전적 성향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지리교과서를 통해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對 남한 우월성을 선전하려고 하는 철저한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남한의 경우와 정반대로서 김일성 유일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높은 산업 생산력과 주민 생활의 풍요성을 장황히 열거하고 있다.

### Ⅲ. 한반도 정세 변화의 의미와 통일 교육의 방향

#### 1. 정치적 배경

80년대 말 이후 세계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와해, 독일의 통일, 남한의 북방정책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냉전기류를 멀리 쓸어갈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지 못하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의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한이나 미국과의 대화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서 남한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통일 정책적 측면에서 과거의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그 방향을 크게 선회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의 大兄論과 흡수통일 不可論, 북한의 실제 인정으로 대표되는 남한 정부의 입장 천명과 더불어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각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크게 고양된 남한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명분과 도덕성을 앞세우면서 통일 환경을 구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 9. 27),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1992. 2. 19, 부속합의서: 1992. 9. 16)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즉각 사회 각 부문에서 종래의 냉전 구조적 對 북한관을 시정하고 통일을 대비한 체질 강화를 주장하는 대논쟁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UN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야기된 남북 관계의 변화의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1) UN 동시가입으로 인한 남한의 대북 시각 변화

북한이 주권을 가진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됨으로써(UN 헌장 4조)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는 대전제는 흔들리게 되었다. 북한 또한 남한의 실체를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남 북한은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각기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분단국이 되고 말았다(김명기, 1992).

남한의 입장으로 볼때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1991; 1992). 일부 학계에서는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여 헌법 3,4조의 흡수 통일적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헌법체계를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 헌법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정부 측에서는 문제되는 헌법 3,4조 항을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제 4조인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중점을 두어 제 3조 영토조항은 상대적으로 법적 지위가 약화된다는 논리를 펴으로써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돌발적 사태에 대비하고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러 통일 헌법으로 대체하자는 현실론(통일원, 1993a)과, 당장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헌법도 완성헌법이 아닌 구서독식 잠정헌법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상론의 대립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UN 동시가입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 어떠한 법적 변동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북한의 실체를 국가로 인정은 못하더라도 통일 협상 대상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최소한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local de facto government)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통일원, 1992).

#### 2)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로 인한 남북한 관계 규정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분에서 공동노력하자는 남북한간 기본합의서 정신은 일시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국제적 제재조치에 굴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

을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여 국제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UN 동시가입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영속적 분단국가가 아닌 한반도를 통할하는 통일 민족국가의 성립을 열망하고 있음을 뜻한다.

·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에서 본 논문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해 보면,

제1장: 남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제3장: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한다.

제6장: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도모한다.

·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제 3장에서는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을 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 삼고 있다. 이는 국경선의 의미가 아니라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 이질적 체제의 분단선으로 존중하자는 것이다.

· 남북 교류 협력 합의서의 제1장 1조에서는 ‘남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현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2. 통일교육의 재정립

### 1) 통일교육 개념의 변화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은 한국지리를 포함한 관련 교과목 전체에서 반공적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북한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였다. 이같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교육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 무관심 조장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반공교육의 기초에서 통일 안보교육으로 바뀌어 이념적 편향성을 완화하고 동족으로서의 북한 동포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통일 환경을 수용하는 데는 미흡하다. 일선교육현장에서 북한의 실정을 잘 모름으로 인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런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통일의 전개에 따라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 교육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대비교육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국제정세 변화, 남북한간의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독일 통일 이후 혼란으로 볼때 한국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의 혼란에 대비하는 동질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더이상 체제경쟁적, 우월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절충주의적 교육관을 지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 선택에 의한 자아 실현 강조의 자유주의적 관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향적, 평등주의적 관점도 형평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백종억, 1992).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통일원, 1993b).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한다.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한 민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고자 함은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한다. 남북한 간에 상호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도 통일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취한다.

둘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추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교과서에 반영함이 통일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이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통일후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도 실상을 아는 것은 불가피하다.

셋째, 남북한 사회체제의 객관적 현실 비교를 통해 각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알도록 한다. 이는 장차 통일 한국은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체제를 찾는 데 전제조건이 된다.

넷째,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통일국가, 한민족 공동체 건설 대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미 통일된 독일, 예멘, 베트남 등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거울삼아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면 각 경제주체, 지역, 계층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교육하여야 한다.

## 2) 통일교육의 현실적 제약

북한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앞서 논의한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또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찾아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북한에 대한 경직된 시각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전혀 장애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을 재검토함에 있어서 상호주의적 입장과 대승적 입장 중 어느 것을 취할 지 결정되어야 한다. 조건부로 고칠 것인지, 또는 북한측이 경직된 태도를 버리지 않을지라도 이에 상관없이 남한측이 독자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칠 것인지의 여부이다. 기존의 상호주의적 입장을 대승적 입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사회의 제반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얼마만큼 우위를 확신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실상 남한은 북한 실체를 인정하는 정치와 북한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간 기본관계를 설정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각각의 법규정에 구속되어 합의서의 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지리를 포함한 각종 교과서가 국가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에 대한 자료 또한 여러 이유로 그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통일교육 강화에 애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세밀히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IV. 북한관련 『한국지리』 내용의 개선

본 논문에서는 한국지리의 북한 부분, 통일 부분의 내용을 개선함에 있어 지역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 통일교육 강화차원 등 기본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내용상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편제의 대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차원

제6차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지리의 북한 부분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교과서관련 제반 법 규정의 준수였다. 이를 경직되게 해석하면 북한정권 및 이의 통제하에 있는 북한지역은 불법 집단 성격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다면 상호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서 내용 중 한국지리에 관련되는 것으로는 크게 보아 체제인정 문제와 비방증지를 들 수 있다.

#### 1) 체제인정

상대방 체제 인정에 있어 합의서에 따르자면 상대방을 국가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지방적 정부로 승격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로 볼때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남북한 분단선인 휴전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통일원, 1992).

지금까지 한국지리 교과서의 '위치와 영역' 단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동아시아, 아시아전도 등 세계지도에도 헌법 3조에 의거 휴전선의 존재와 북한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여 왔다. 외국의 어느 지도첩을 보더라도 영토 분쟁관계에 있는 지역(예: 서사하라, 인도북부 등)은 국경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국경의 파선,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휴전선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곧 북한을 국가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또한 지리부도의 기존 지도첩에서 표기할 때 휴전선을 각급 행정구분선보다 약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실정인데, 휴전선의 의미가 행정구분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므로

보다 강하게 표현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라는 명칭을 지도에 표기할 것인가의 여부, 표기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이다. 합의서에 따라 상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명으로서의 북한을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남북한을 모두 국가로 취급하는 실정 하에서 실존하고 있는 상대방을 표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가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 관할지역’ 또는 ‘(북한)’으로 표기하거나 북한이라는 글자를 지방적 정부라는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국명보다 작게 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휴전선과 북한의 표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과서에서 이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행정구역에 관해서 남한의 교육당국은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정통으로 삼고 그 후 북한에서 변화해온 행정구역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위’ 또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등의 단서를 붙여 북한의 실정을 알린다는 의미 외에 그 불법성을 동시에 알리고자 하였다. 상호간 실제 인정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최근의 북한 행정구역을 조건없이 소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제까지 북한의 행정구역을 부정해온 근본 이유로는 통일시의 권력구조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시도로 해석해온 것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강고히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변화시켜 왔다고 해석함이 현실적이다.

한반도 전체의 지역구분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 이후의 새로운 지역구분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역구분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축소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한국지리의 지방구분에 있어 ‘북부지방’은 실제인정의 입장에서 ‘북한관할지역’ 또는 ‘북한지역’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2) 비방증지

남한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북한의 교과서에 비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북한은 불법 집단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깔면서 북한의 체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이 없이 결과만을 남한과 비교하여 평가절하하거나 북한 실정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대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직접적인 주입식 결론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이 훨씬 설득력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인권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과는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은 지난 50여년간 북한 정권의 통제하에 그 체제에 익숙하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여 어떠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용이치 않다. 교과서에서 북한 정권의 모든 행위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심어주게 하기 쉽고 통일 이후 독일의 경우보다도 훨씬 심하게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지리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없이 비방, 평가절하, 대립·조장하는 것에서, 통일에 대비한다는 취지하에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포용하여 안정된 통일 한국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크게 바뀌어져야 한다.

## 2. 통일교육 강화 차원

6차 교과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국토의 분단과 통일’과 같은 통일전략적 차원의 단원도 필요하지만, 북한지리에 관한 내용을 대폭 늘리고 객관적인 남북한의 부문별 비교를 통해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통일전략에 관한 교육 이전에 통일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중시하는 태도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라는 경구와 무관하지 않다.

5차 교과과정에 의한 한국지리의 경우 출판사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북한(북부지방)에 대해 285쪽 중 11.5쪽(4%)을 할애하고 있다. 자원과

산업, 인구나 생활공간의 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북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북한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각 단원마다 북한을 다루는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북한의 '조선지리'(1983)의 경우 지지중심의 편제를 택하고 있어 남한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264쪽 중 61쪽(23%)을 남한 내용에 할당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지리적 내용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이 요청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또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차적인 자료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통일원을 비롯한 정부관련기관, 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와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등 이차적인 간접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근년 북한에 대한 자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어, 북한의 지리적 내용을 개선시키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를 참고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포함된 선전적 내용이나 과장된 통계(사실 교과서에 통계제시는 아주 드물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북한의 실정을 전면적으로 조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지리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조선지리' 교과서를 참고하는데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한의 부문별 비교 분석이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비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조속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북한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 직접적인 통계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사실인데, 이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한국지리』 교과서 편제 개선

북한의 '조선지리'의 경우 지지를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남한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계통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 북한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는데 문제가 있다. 즉 각 단원 말미에 북한에 대해 다소간 언급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곳도 있어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국토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단원의 신설은 6차 교과과정에서 개선된 부분이나, 이외에는 과거와 같이 통일 환경의 기반 이해에 유익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한국지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다루지 않을까 우려된다.

효과적으로 북한지리를 다루기 위한 개선책으로서 지금까지의 계통 중심의 단원구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내용이 각 단원에 분산 처리됨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개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남한과 다른 체제를 가진 북한의 내용에 대해 매번 배경설명을 부가하는 것도 애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한 체제와 관련이 없는 한반도의 자연환경 단원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생활공간, 경제활동, 국토개발, 지역지리, 대외관계 등 체제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켜 체계화시키며,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 V.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지리 내용이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실체 불인정과 체제우월적 기

술 방식의 원칙이 북한에 대한 지리적 묘사의 기본토대임에는 변함이 없다.

90년대 초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져야 한다. 즉 북한이 불법 집단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마냥 적대시할 수만은 없고 통일을 이루는데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상대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비중있게 또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내용의 적실성과 시의성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체제인정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경계선인 휴전선과 북한의 행정구역, 한반도의 지방구분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함이 바람직하고,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북한을 의미없이 비판, 평가절하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지리적 결과를 북한의 체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객관적인 기술이 요청된다. 또한 통일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의 통일전략을 제시함에 앞서, 남북한 각 부문의 비교 내용을 부가하여 피교육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간접적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 현실적인 제약요건으로서 우리의 법 체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공신력있는 자료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지리 부분을 확충함에 따라 한국지리 교과 편제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 註 >

- 1)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한국지리 교과서 8종,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1983, 조선지리(중급), 학우서방(동경).
- 2) 북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분석적 의미에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
- 3) 화해공동위원회 부속합의서 제7조, 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에 해당.

### < 參考文獻 >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3, 조선행정구역도.  
 교육부, 1993, 1996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  
 國立地理院, 1980, 韓國地誌(總覽).  
 국토통일원, 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통일정책 해설자료).  
 김명기, 1992, UN 가입에 의한 북한 승인과 통일논리,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일원, 212-230.  
 문교부, 1988, 1990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  
 백종억, 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탐색, 통일문제연구, 제 4권 1호, 통일원, 195-211.  
 ———, 1992, 남북 통일을 위한 대처 방안과 법적 문제, 1-41.  
 정용길, 1992, 부속합의서 발효와 남북한 관계 발전 방향, 통일문제연구, 제 4권 4호, 통일원, 9-32.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1983, 조선지리(중급), 학우서방(동경).  
 최대권, 1990, 통일의 법적 문제, 법문사.  
 통일원, 1992,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3a, 김영삼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통일원, 1993b, 화해 협력 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9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 통일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991, 90년대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와 법적 대처방안, 제 1부: 남북한 사회의 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대책, 11-65.  
 한국지리교과서 8종 (5차교육과정의거).

## The Progressive Views to Reform High School Textbook 'Geography of Korea' -Toward the Reunified Korea-

Jaehan Kim\*

### Summary

The end of the Cold War had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rought about the dramatic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two Koreas. North Korea has been further isolated while the status of South Korea has been enhan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South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reunify the peninsula based on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moving away from the previous strategy based on the ideological conflict. The gloomy reality, however, is that North and South Korea still do not recognize each other.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stipulate that each side has the exclusive right to represent Korea. The textbooks 'Geography of Korea' used in the schools of South Korea describe, from the standpoint of anti-communism, the North Korea as an illegal regime occupying the northern Korean Territory. The basic policy of the South does not intend to modify the provisions related to territory in its constitution.

A new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to meet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textbook 'Geography of Korea'. The following points can be suggested as a guidance to rewrite the descriptions related to North Korea or reunification in the 'Geography of Korea'.

First, the truce line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nd need to make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governing entity both in the textbook and the atlas to be taught in the schools. Criticizing and degrading the North Korea without proper grounds based on ideological conflict should be avoided, and more objective description of North Korea be encouraged.

Second, geography of North Korea should be described as it is and in detail.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have the opportunity to perceive the realities of two Koreas by comparing the both areas.

These measures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the geography edu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Key words** : the textbooks 'Geography of Korea', geography of North Kore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education for reunification.

---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